

바이든의 주요 정책 점검 및 경제적 영향 분석



하나은행

조*경/0118430**/2020-11-10 16:25

< 요약 >

■ 美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당선이 확실한 상황

-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를 중심으로 박빙의 승부를 나타냈으나, 바이든 후보가 개표 후반 역전에 성공하면서 대선 승리 유력
- 코로나 여파로 우편투표 비중이 높아 일부 州에서 개표가 지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및 대규모 소송 등으로 당선인 최종 공표는 미정
- 한편, 상·하원 선거 역시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나,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백중세를 나타냄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환경 등 주요 정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이 예상되나, 美 중심주의 및 美·中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

- (경제 정책) 친환경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기초 속에 중산층 복원 및 공공경제 구축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기업규제 강화 등을 추진 전망
 - 바이든 조세정책의 핵심은 부자 증세 및 법인세 인상이며 이를 통해 세수 증가 및 조세 재분배 기능 강화를 추구
 - 바이든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에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인프라 투자의 경우 친환경에너지 및 미국내 공급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시행될 가능성
- (대외 정책)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및 고립주의에서는 벗어나겠지만, 미국내 제조업 회복 및 공급망 재건을 위해 美 중심주의 무역정책은 지속할 가능성
 - 다자주의 무역체제 회복을 추진하면서도 바이든 역시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으로 판단
 - 對中 정책 역시 트럼프와 방식은 다르지만, 공정무역 및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우방국과의 공조 속에 환경·인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對中 압박 지속 전망
- (기타 정책)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교육 등을 중심으로 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친환경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나아가 잠재성장을 향상을 위한 신성장동력 구축에 중점

■ **바이든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추진 및 불평등 완화 노력 등에 힘입어 美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

- (미국경제) 코로나發 경기침체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확대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 노력 등은 美 경기회복세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
- (국내경제) 美 성장 모멘텀 확대 및 자유주의·다자주의 회복은 경제심리 및 금융여건 개선, 수출 증가 등으로 연결되면서 국내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금리)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국채발행 확대 등은 대외發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실제 정책 강도 및 국내 경기회복 경로 등이 관건
 - 만약, 美 금리가 급등할 경우 금융불안 재현 및 취약계층·한계기업의 부담 가중
- (환율) 美 재정적자 심화 및 온건한 대외정책 추진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 속에 원/달러 환율의 하향안정세가 예상되지만, 美·中 갈등 지속 및 변동성 위험 상존

■ **다만, 美 대선결과 지연과 의회 양분 여부에 주목하는 가운데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對中 압박 등이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에 유의**

-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주요 경합주의 재검표, 법정 다툼 등으로 대통령 당선 확정 지연 및 정책 공백 발생 우려
-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의 승부를 나타내고 있어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바이든의 정책 추진력 약화 소지
 - 특히, 바이든의 조세정책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재정재원 마련에 난항 예상
- 한국경제에 있어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무역정책과 G2 갈등 지속 가능성, 엄격한 환경규제 적용 등에 따른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재확대 여부 중요
 - 바이든 시대의 새로운 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무역 경로가 약화될 경우 美 경기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축소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특히, G2 갈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동맹국 중심의 對中 압박이 강화될 경우 한국은 양자택일 및 진퇴양난에 봉착할 위험 존재

연구위원 정 유 탁 ***gyt@hanafn.com

I. 2020년 美 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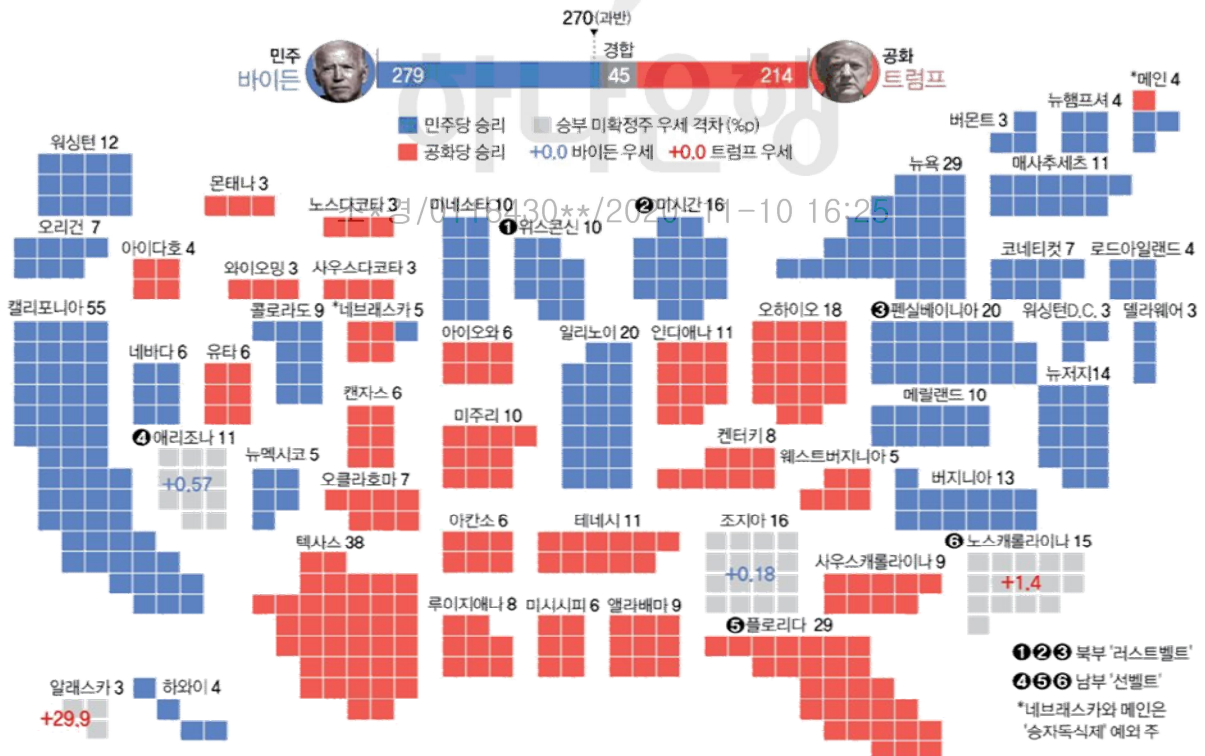
1.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여 얻은 바이든 후보의 신승

- 개표 초반 여론조사와 달리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를 보였으나, 개표 후반 우편투표 및 대도시 지역 개표가 시작되며 바이든의 승리가 유력해짐
 - 11.8일 기준, Pennsylvania州와 Nevada州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 되며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Arizona州와 Georgia州까지 승리시 306석 확보 가능
 - Pennsylvania州에서 바이든이 역전을 보인 이후 Delaware州에서 공식적인 대선 승리 연설을 발표, ‘미국 사회 및 동맹국과의 통합’과 ‘조속한 코로나 극복’을 강조
-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의 비중이 높아 일부 州에서 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까지는 여전히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미국은 평균적으로 50%대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번 선거는 66.8% 투표율을 기록, 약 1억 6,000만 명이 투표에 참여. 이중 바이든은 7,500만 표 이상을 득표(역대 최대)
 - 현재 Nevada(6), Pennsylvania(20), Georgia(16), Arizona(11), North Carolina(15), Alaska(3) 6개州는 개표 진행 중 *괄호 안은 선거인단 수를 의미
 - 개표율이 가장 낮은 Nevada州(93%)의 우편투표 도착 시한은 11.10일
 - 경합주 대부분 표차가 1%p 내에 있어 주법에 따라 재검표 가능성이 존재. 재검표 시 13일 이내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 최종 결과 발표가 수일간 지연될 수 있음
 - Wisconsin州와 Georgia州는 주법에 따라 이미 재검표를 결정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 대법원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 1월 당선인 최종 공표 전까지는 대선 관련 불확실성 잔존
 - 현재까지 트럼프가 제기한 선거관련 소송들은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에서 우편투표 부분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 잔존
 - 11.6일 대법원은 3일 이후 도착한 Pennsylvania州 우편투표에 대해 따로 집계를 명령
 - 향후 일정: 12.8일 선거인단 확정 → 14일 선거인단 투표 → 23일 연방의회 결과 송부 → 내년 1.6일 의회 개표 및 당선인 최종 공표 → 1.21일 취임식

2. 공화당의 색깔이 짙어진 것을 확인한 의회 선거

- 상원: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임기 6년)은 전체 100석 중 35석 선출.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일하게 48석을 확보하였으며, 4석은 아직 미정
 - 개표 진행 중인 ㄷ들 중 Alaska州는 공화당 우세가 확실시 되지만, 10일부터 우편 및 부재자 투표 개표를 시작하며 최종 일정은 미정. North Carolina州는 공화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며 최종 결과는 12일 예상
 - 마지막으로 Georgia州는 2석 모두 과반 확보 실패로 결선투표(내년 1.5일) 예정. 2석 모두 민주당 후보 당선시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음
 - 50대 50 동석 확보 시, 부통령 1표를 추가로 행사하여 민주당의 다수당 확보 가능
- 하원: 하원의원(임기 2년) 전체 435석 대상 선출. 현재까지 민주당은 215석, 공화당은 196석을 확보하고 24석은 미정인 가운데 민주당 과반 확보가 예상됨
 -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지만 現232석 대비 하원 의석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림1 | 2020년 美 대선, 州별 선거인단 확보 현황 (한국시간 11.8일 기준)



자료 : NYtime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II. 바이든의 경제정책

- 바이든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슬로건인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은 부자·대기업 중세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데 방점
 - 바이든은 고소득자·대기업 세금감면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중시했던 트럼프와 달리 부자와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조세제도를 개편할 계획
 - 바이든은 고소득자의 최고세율, 급여세율 및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의 법인세 인상,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 확보 및 조세 재분배 기능 강화 전망
 - 이와 동시에 그린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복지(교육,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중산층 복원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총력을 다할 전망
 - 바이든은 향후 4년간 총 3.9조달러(10년간 7.2조\$)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계획
 - 클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그린 인프라 투자,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및 공급사슬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의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교육 혜택을 강화할 예정
 - 또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권리와 혜택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 친화적 정책을 다수 추진할 것으로 예상

표1 |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제정책 비교

	바이든	트럼프
조세	부자 중세, 대기업 중세	세금감면 확대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투자 (그린 중심)	대규모 인프라투자 (전통 SOC 중심)
노동	연방 최저임금 인상 노조 결성 간소화	연방 최저임금 유지 노조 결성 권리 축소
기업·금융 규제	빅테크 기업 독점 구조 개편 금융산업 규제 강화	기업·월가 친화적 정책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인종·경제적 차이 고려	완화적 통화정책

자료 : joebiden.com, 언론보도 종합

표2 | 바이든 정부 주요 분야 재정지출 계획(4년,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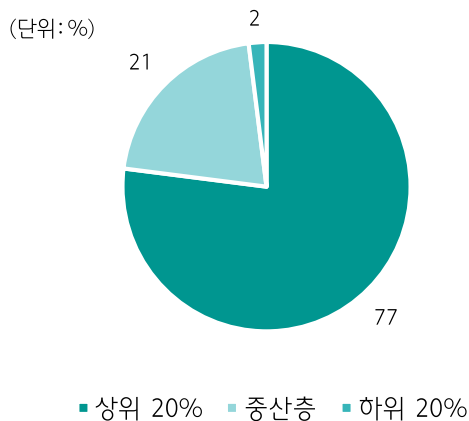
	16:24년간 (2021~2024)	10년간 (2021~2030)
인프라	2.3조\$	2.4조\$
교육	6.3천억\$	1.9조\$
사회안전망	3.6천억\$	1.5조\$
헬스케어	6천억\$	1.5조\$
총합	3.9조\$	7.2조\$

자료 : Moody's

1. 조세정책

- 바이든 조세정책의 핵심은 ‘부자 증세’ 및 ‘법인세 인상’이며, 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의 대부분이 상위소득 그룹 및 다국적 대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
 - 바이든의 조세정책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공제혜택 축소와 법인세 인상, 자본소득세 인상 등을 통한 조세의 누진성 및 재분배 효과 강화에 중점
 -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4조달러(2021~2030년간) 중 소득세 인상에 따른 세수는 1.9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93%는 소득기준 상위 20%가 부담하게 되며, 상위 1%는 약75% 부담(美조세정책센터(TPC) 추정)
 - 소득 상위 1%(연소득 83만7천\$ 이상)는 세후소득이 평균 30만달러 감소하고, 상위 0.1%(연소득 3.7백만달러 이상)는 소득의 약 1/4(약 1.8백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법인세의 세수 증가는 약 2.1조달러로 추정되는데 그 중 91%가 법인세 인상, 미국 기업의 해외수익 최저세율 인상 및 대기업 세제혜택 축소로 충당할 예정
- 결국, 바이든의 세제개편안은 트럼프가 2017년 시행한 조세감면을 상당부분 되돌려 세수 증가 및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로 이어질 전망
 - 바이든의 조세정책은 2017년 트럼프 정부하에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제정된 조세감면과 고용법(TCJA)을 되돌려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다만, 40만달러 이하를 버는 가구의 경우 세율의 변화에 따른 부담은 없지만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기업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상존

그림2 | 소득 그룹별 미국 부의 점유율



주: 중산층은 소득 5분위 중 2,3,4분위를 합하여 산출
자료: Brookings

표3 | 바이든과 트럼프의 조세정책 비교(공약 중심)

	바이든	트럼프
법인세	현재 21%→28%로 인상, 대기업 최저한세 15%	현 21%로 영구 인하 및 기업투자 공제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36.9%로 인상, 40만\$ 이상 가구 사회보장세율 인상, 세액공제 축소	현행 최고세율 유지, 10만\$ 이하 가구 소득세 영구적 인하
자본소득세	소득 100만\$ 이상 가구 자본소득에 소득세 최고세율 39.6% 적용	자본소득세를 인하 현 23.8%→15% 수준
해외 소득 최저세율	글로벌 저과세 소득(GILTI) 최저세율 인상(10.5%→21%)	현 수준 유지
기타	오프쇼어링 추정세(최대10%) 본국 회귀 장려 세액공제(10%) 등	리쇼어링 펀드 조성 금융 인센티브 제공

자료: joe Biden.com, 언론보도 종합

2. 인프라 투자

- 바이든은 10년간 2.4조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계획
 - 특히, 이번 인프라 투자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인데다 그 중 약 98%에 해당하는 2.3조달러를 4년(2021~2024년)안에 모두 투입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규모는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비교시 4년간 투자규모가 약 6배(10년간 2.2배)에 달해 코로나 이후 미국 경기 정상화 가속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클린 에너지 전환 중심의 대규모 그린 인프라 투자 예상
 - 대중교통, 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화석연료를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주택 및 빌딩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하는 등 그린 인프라 중심의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전망
 - 특히, 바이든은 4년간 총 2조달러에 달하는 그린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발전소 발생 탄소오염 배출 중단(2050년, 100% 클린 에너지 전환) 선언
- 또한, 미국산 제품 구매와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미국 내 공급망을 확충할 전망
 - 바이든 정부는 클린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시 미국산 제품과 기술·공급망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Buy American, Make it in America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할 전망
 - 또한, 자국 내 5G, AI, 바이오기술, 클린에너지 개발을 위한 R&D에 3천억달러를 투자해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안보·보건상 중요한 제품의 공급망 본국 회귀도 장려할 계획
 - 오프쇼어링 추정세 부과(최대10%), 제조업 본국 회귀 장려 세액공제(10%) 혜택 제공 등

표4 | 바이든의 클린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정책	내용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2050년, 순 탄소배출 제로	100% 클린 에너지 경제로 전환 및 순 탄소배출 제로 달성
2035년, 제로 탄소오염	전력 발전소 탄소오염 배출 제로 달성
건물 전력 효율 업그레이드	2035년까지 전력 효율화 투자를 통해 미국 내 빌딩의 탄소배출 50% 감소
환경 규제완화 정상화	트럼프 정부하에서 완화된 환경관련 규제 복원

자료 : joe Biden.com

표5 |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확충을 위한 정책

정책	내용
Buy American	4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재료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클린에너지 및 인프라 건설에 활용
Make it in America	중소 제조업체 미국 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금융지원 등 제공
Innovate in America	3천억달러 규모의 R&D 예산을 전기차, 5G, AI 등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
Supply America	국가 안보 및 보건상 중요한 제품의 공급망을 미국으로 복귀

자료 : joe Biden.com

3. 노동정책

- 바이든의 노동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국 중산층 복원에 방점
 - 바이든은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대규모 인프라 및 R&D 투자, 중소기업·유색인종 기업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전망
 - 미국 내 대규모 그린, 디지털(5G, 스마트로드)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대량 공급 계획(클린 에너지 관련 일자리 천만개 창출 목표 설정)
 - 또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험 프로그램 개선 및 중소기업·유색인종 기업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임금 및 고용 안정성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
 - 아울러,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재건 정책 역시 일자리 공급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중산층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 또한, 바이든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 권리·혜택 강화 등을 통해 미국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다수 추진할 것으로 기대
 - 바이든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실업 급여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을 통해 노동자 고용여건을 개선할 계획
 - 또한, 노조 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하는 노조결성권리 보호법(PRO)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 그 외에도 보편적 유급병가와 가족·건강 관련 12주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 노동자들에게 공공건강보험 옵션 제공 및 21일·약가 인하를 5제공할 것으로 예상

4. 금융산업 및 기업규제

- 바이든 정부는 도드-프랭크법 및 볼커룰 복원, 글래스스티걸법 현대화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재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가 개정한 도드-프랭크법 부분 개정 환원 및 감독 당국의 권한으로 자본, 유동성 규제 강화, 리스크 관련 절차 엄격화 등을 통한 규제 강화 기조가 나타날 전망
 - 특히, 글래스스티걸법 복원을 주장하는 엘리자베스 워런을 필두로 민주당 내 대형 은행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코로나19, 경기회복, 기후변화 등 다른 정책들에 비해 우선순위는 다소 낮은 편

- 한편, 기업 정책에서는 공정한 경제 구축을 위한 독점 규제 및 기업 지배구조 개편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 시장지배력 남용 및 반독점법 위반 관련 이슈 제기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미국 내 공정 경쟁 촉진 및 반독점 피해 방지를 위한 빅테크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될 전망
 - 최근 美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분과위원회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의 지배력 남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구조적인 분할 유도 권고(반독점 보고서)
 - 또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 도입, 근로자 주주비율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5. 통화정책

- 통화정책 기조 관련 바이든의 공식 언급은 없었으나,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통화완화 및 저금리 기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 재정의 화폐화를 옹호하는 현대화폐이론(MMT)의 주창론자로 알려진 스테파니 켈튼의 바이든 캠프 합류 등으로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
- 또한, 민주당과 바이든은 연준의 양대 목표(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에 인종별 일자리, 임금, 부의 차이 등 경제적 불평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주문할 전망
 - 이러한 요구는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 변경보다는 금리 결정시 전체 실업을 외에도 인종별 실업률 등도 함께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도가 목적

표6 | 바이든 정권 하에서 예상되는 금융산업 규제

개정 가능한 주요 법안	-도드-프랭크법 -볼커룰 -글래스티걸법 -지역사회재투자법
금융 관련 규제 강화	- 금융거래세 도입 - 대형 은행 규제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리스크 관리 및 공시의무 - 정부 역할 강화에 따른 소매금융 구조 변화 - 대형 은행 및 월가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 - Basel IV 이행 및 자본규제 관련 추가 규제

자료 : Oliver Wyman

표7 |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반독점 관련 조사 현황

기업	조사 주체	조사 내용
구글	FTC, 법무부, 하원법사위, 검찰	-반독점법 위반 -검색·광고·스마트폰운영체제 독점 및 시장 지배력 남용
애플	법무부, 하원 법사위	-반독점법 위반 -인터넷 소매시장 독점 -불공정 계약 및 약관 적용
페이스북	FTC, 법무부, 하원 법사위, 검찰	-반독점법 위반 -개인정보유출 -독점적 지위 남용 -광고 시장내 불공정거래
아마존	FTC, 법무부, 하원 법사위	-반독점법 위반 -인터넷 소매시장 독점 -불공정 계약 및 약관 적용

자료 : 언론보도

III. 바이든의 주요 대외 정책

1. 외교 및 안보 정책

- 민주주의 가치를 주요 수단으로 미국 외교를 활성화시키고, 동맹 기반의 국제협력력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리더십 회복
 - 민주주의를 주요 수단으로 외교를 활성화시키며, 동맹의 다자화 및 네트워크화 추구
 -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했던 국제기구에 재가입하여 이들을 개혁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며, 해외원조 강화·난민 포용정책 등으로 자유세계 단합 주도
 - WHO, UN Human Rights Council, UN Population Fund 등 재가입, USAID를 통한 해외원조 프로그램 강화, 트럼프의 이민정책 철폐, 연간 입국 허가 난민 수 증가 등
 - 미국 국익의 우선, 대중국 견제와 같은 초당적인 외교정책은 지속하면서, 초국가적인 도전들에 대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힘을 결속
- 국제질서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를 지양하고 전략적 외교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안보환경 구축
 - 트럼프가 파기한 군축협정의 갱신, NPT 강화, CTBT 비준, 동맹국들과의 사이버 안보시스템 구축 등 국제질서 준수에 의한 평화 추구
 - 일부 제한된 무력사용은 지지하지만, 일방적인 정책이나 무력을 통한 국제환경 변화에 반대하며, 주요 4군축 협상국들에 대해서는 전략적 접근 필요
 - 대중국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동 이익인 글로벌 보건안보, 핵 비확산 및 북핵문제 해결 등에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추진

표8 | 바이든 vs. 트럼프 외교안보 관련 정책 비교

주요정책	바이든	트럼프
대외정책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동맹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현실주의
동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맹의 중요성 강조, 동맹의 재건 및 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맹의 전략적 논의 부재, 거래적 관계
비핵화와 핵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질서 회복을 통한 다자주의적 안보환경 이란, 북한위협 등의 관리에서 전략적 접근 필요 ▪ NPT강화, CTBT 비준, New START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th) 도전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 역량 포함한 군사력 현대화 및 강화
팬데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국가적 도전으로 중국 등 글로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심의 백신개발 지원, 향후 팬데믹 대응준비

자료 : 김현욱(2020)

2. 통상정책

- 미국의 통상정책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전파를 위한 대외정책’의 일부라는 점에서, 바이든은 이러한 ‘가치 수호자’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할 것
 -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TPP, NAFTA를 탈퇴하며 다자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고, 자유무역을 대표하는 WTO체제도 부정
 - 그러나 바이든은 WTO체제를 미국이 주도하여 現무역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면서 다자주의·자유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
 - WTO 준수, TPP 재추진 등 다자주의 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트럼프의 통상정책 대부분을 되돌리고 유럽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트럼프 이전으로 회귀
 - 다만 바이든은 통상환경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환경 및 노동 관련 개선 사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외 통상환경 개선(특히 對중국)은 기대보다 더딜 가능성

- 양자간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관세 철회, 동맹 관계 강화 개선이 기대되나, 미국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어 신규 무역 협정은 제한적일 전망
 - (美-EU) 디지털세, NATO 분담금 등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의 통상 분쟁 대부분이 중단되고 양국의 경제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美-인도) 바이든은 인도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관계 강화에 적극적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FTA협상 등을 비롯해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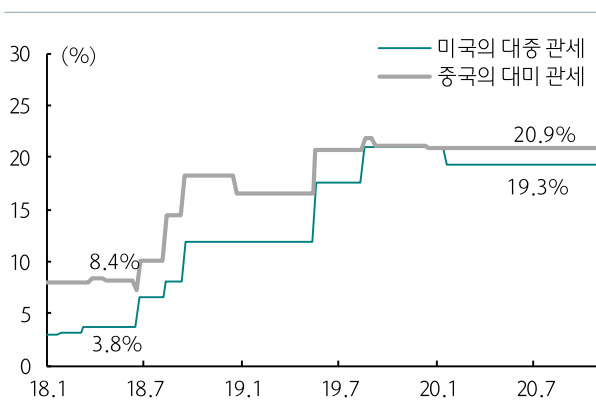
조*경/0118430**/2020-11-10 16:25

- 동시에 바이든 역시 ‘공급망 정책’ 및 ‘제조업 회복’과 관련된 대외 정책을 중심으로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일정 수준 유지
 - 바이든의 공급망 정책은 생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글로벌 공급사슬이 일부 ‘로컬화’되는 흐름이 예상됨
 -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약품 등 필수 산업의 해외 생산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미국 사회에 대두되었으며, 이는 바이든의 공급망 정책에 명분을 제공
 - 바이든의 공급망 정책: Buy American(납세자들의 돈으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원), Make It In America(미국 제조업 부흥)

3. 對中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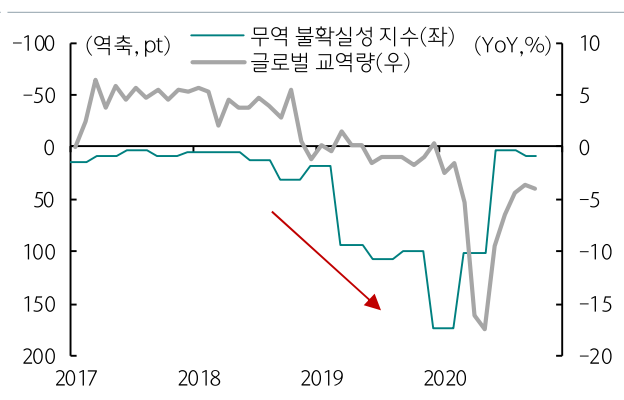
- 바이든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미래 시대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
 - 클린턴, 오바마 당시 중국을 민주주의 및 자유경제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유화책은 오히려 중국 경제 번영 및 독재체제 강화로 미국 경제에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평가
-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국가간 갈등을 보였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전통 우방 국과의 연합 및 공조를 통해 대중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은 차이점
 - 일대일로 등 중국의 성장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의 對아시아 전략으로 TPP 재추진, 인도-퍼시픽의 확대 등 제2의 Pivot to Asia 정책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 기대
 - 한편 바이든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원재료 가격 상승을 부추겨 美 농민 및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되었다고 비난
 - 관세보다는 환경·반독점·인권·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영역에서 동맹국과 연대를 통해 對중 압박을 가할 전망.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갈등 예상
- 바이든의 대중정책이 트럼프에 비해 유화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G2 공급망 리밸런싱 과정에서 쟁점별, 산업별 일부는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
 - 장기적으로 미국은 전통적인 소비국가에서 생산국가로, 중국은 생산국가에서 소비국가로 변환하고자 하는 G2 공급망 리밸런싱 과정에서 배타적 경쟁 불가피

그림3 | 미중 관세율 추이



자료 : PIIIE

그림4 | 통상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교역량 축소



자료 : Bloomberg

4. 한반도 정책

- (한미동맹 강화 및 딜레마) 한미동맹 중시, 대북정책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 존중 등 전통적인 동맹관계 강화와 함께 ‘동맹의 연루’ 딜레마 봉착 우려
 - 중국의 부상과 패권도전에 대응하여 동맹의 재건을 넘어 재해석(현재 미국의 동맹국 재정의)의 틀에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고, 대북정책에서 한국정부 의견 존중
 - 공정한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현규모 유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동맹정책 추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동맹의 연루’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 증가
 -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및 동아시아 동맹 결속 차원에서 미국의 한일 갈등 개입, 미중 사이 양자택일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추진에 난항 예상
 - 유엔군사령부(UNC) 존속 유지와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춘 다음 전시작전권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의 지역안정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 가능성 존재

-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다자주의와 단계적 협상에 의한 ‘제재와 대화의 동시추진’으로 북핵문제 해결 지연 가능성 경계
 - 대북제재 유지下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단기적으로는 핵확산 감소를 목표로 단계별 실무협상을 추진하여 북한을 올바른 대화의 틀로 유도한다는 입장
 - 정상외교보다는 동맹국들과의 다자 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에 주력하되, 조건이 마련되는 경우 고위급 특사파견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언급
 - 대북정책 후순위, 상향식 접근, 대북정책 라인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2021년 하반기 한국의 대선국면 전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북핵문제 해결 지연 가능성 존재

표9 | 바이든 vs. 트럼프 한반도 정책 비교

주요정책	바이든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방위비 증액을 갈취(extort) 규정	공정한 분담 강조, 대폭 증액
주한미군 철수	일방적 철수 가능성 부정 (협의 없는 주독미군 철수 비난, 동맹강화 강조)	철수 가능성 시사 (방위비 분담금 연계)
대북 협상방식	바텀업(실무협상에 권한 부여)	탑다운(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제조건 없이는 불가, 진전이 담보되어야 가능	재선되면 조속 개최
북한 인권	적극적(심각한 인권탄압 중단 압박)	소극적(동맹국과 북한주민의 인권확립 모색)

자료 : 김도희,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 69호, 국회입법조사처

IV. 바이든의 기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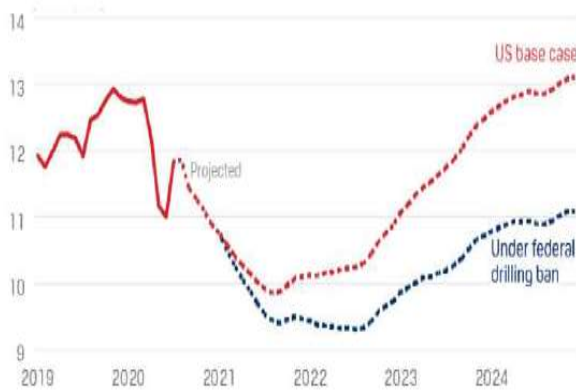
1.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정책

- 글로벌 메가트렌드 선도를 통한 미국의 1등 국가 지위 회복에 기여
 - ‘기업이익’만을 중시한 트럼프의 환경규제완화 가조와 달리, 바이든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친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목표로 함
 -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는 등 주요국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은 당선 연설에서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예고하였으며, 공화당 역시 ‘친환경’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정책 추진력 기대
 -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탈석유 정책 역시 병행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보다는 전통 석유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에 등극하기 위해 석유 생산을 장려한 반면, 바이든은 신규 시추 허가 발급 등 화학에너지 생산을 제한
- 또한, 대규모 친환경 관련 투자로 성장회복 견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바이든의 그린뉴딜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및 고용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 및 지속가능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바이든은 기업감세 축소 및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자금 회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환경 및 기후 관련 분야에 4년간 2조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
 - 기후변화 관련 주요 투자 계획 분야는 3가지
 - (전기차) 2030년 말까지 50만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 배치,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미국 자동차 생산 및 자동차 인프라 분야에서 100만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인프라) 4년간 400만 채의 건물 및 200만 채의 주택을 에너지 고효율로 개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무탄소 대중 교통시설 건설, 화석 연료 보조금 삭감. 관련 분야 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최소 100만개 예상
 - (재생에너지) 탄소 무공해 전력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열 지붕 및 공동체 태양열 시스템 800만개를 포함해 5억개의 태양열 패널 및 6만개 풍력 터빈을 설치

[참고] 글로벌 탄소 중립 선언(Carbon Neutral, Net Zero)

-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분 만큼 감축을 통해 순배출량이 '0'에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과제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발표. 파리기후협약에서는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2015년 대비 1.15°C이상 높아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당사국들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준수하기로 합의
 - 모든 당사국은 20년말까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제출
- 2018년 UN산하 기후변화 관련 정부 협의체인 IPCC에서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여 2050년까지 전세계 탄소 중립을 권고
- 코로나 팬더믹으로 지속가능경제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었음
 - IEA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회복 계획('21~'23년) 보고서에서 전력, 수송 등 친환경 관련 6대 분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
-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움직임은 이미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음. 현재까지 전세계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 일부 국가는 법제화
 - (중국) 전세계 탄소배출국 1위인 중국은 20.9월 UN총회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 또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 (한국) 20년 10월, 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 (미국) 미국은 주마다 상이한 친환경 정책이 시행 중.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에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 미시건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그 외 뉴욕, 하와이 등도 탄소중립을 선언. 향후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전환 움직임 가속화 기대

그림5 | 바이든 정부 하 미국 산유량 변화 전망



주 : 단위는 100만b/d
 자료 : S&P Global Platts(2020.9.3.)

표10 | 국가별 Green New Deal 특징

	한국	유럽	미국
예산/기간	73조원/5년	1조유로/10년	2조달러/4년
GDP대비규모	0.7%	0.6%	2.3%
정부재정/사업비	37%	53%	-
Net-Zero목표	○	○	○
원자력 포함	X	X	○
공정전환	○	○	○
법제화	시도X	추진중	부결

주 : 공정전환이란 저탄소경제 전환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및 부문을 배려하기 위한 금융 지원 운영의 원리
 자료 : KETEO,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헬스케어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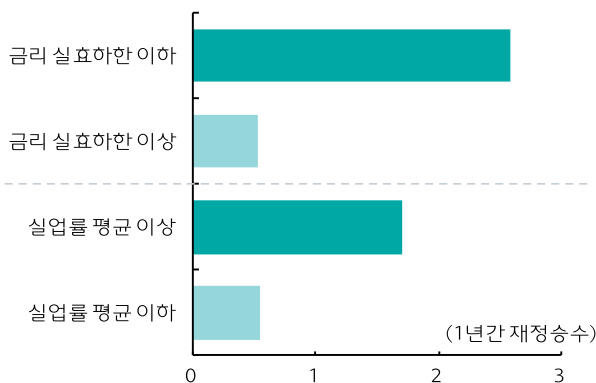
- (오바마케어 부활 및 확대) 미국 1인당 의료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미국인 97%이상 가입(現 91.5%)을 목표로 오바마 케어를 강화하고자 함
 - 서비스 범위 확대: 메디케어(Medicare)의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제공
 - 선택권 강화: 국민들이 메디케어를 건강보험의 민간보험사 옵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Public Option).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 기대
 - 보장범위 확대: 세액공제 기준인 연방빈곤소득상한(FPL) 400% 제한 삭제, 보장비용 최저기준인 소득의 9.86%를 8.5%로 하향
 - 다만 상원 공화당 수성시에는 오바마 케어 확대를 위한 정책 동력이 약화될 소지
- (약가 정책)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공감하는 부분으로, 제네릭(generic) 경쟁 유도, 해외 약품 수입 등 트럼프 1기 정부의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이 제시한 약가 인하 정책
 - 단합 금지: 메디케어와 제약회사간 처방약 가격 협상 금지조항을 폐기하여 제약회사의 권력 남용을 저지. 美의회예산국(CBO)의 조사에 따르면, 처방약 협상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약값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2023~29년까지 4,500억달러 절감 기대)
 - 약가 인상 제한: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약값 인상을 제한하고 약품 수입으로 경쟁 유도
 - 제네릭 시장 활성화: 특허 만료 후 제네릭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제네릭 개발 가속화를 장려
- (의료 인프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미국의 의료시스템 부각, 바이든 정부에서는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할 것
 - 기존 의료 인프라: 예고되지 않은 의료비 청구(Surprising Bill)를 규제, 지역 보건소 확대, 정신건강 관리 및 피임 관련 의료 접근성 확대
 - 원격의료 : ‘시골지역 의료보험 계획’을 통해 시골지역에 가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방 보조금 확대를 제안. 또한 원격 응급실, 중환자실 도입을 주장

V. 바이든 정책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1. 미국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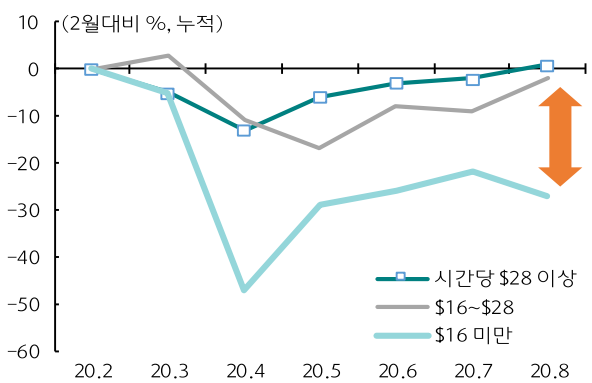
- 대규모 재정지출을 비롯한 정부역할 강화 속에 美 성장 모멘텀 확대 기대
 -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재건 중심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총수요를 진작시키면서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
 -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증대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필요
 - IMF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실업률이 높고(노동시장에 유향인력 존재), 통화정책이 초완화기조(금리 실효하한 이하)를 나타내는 경우에 재정승수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게다가 바이든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 속에 적극적인 친환경에너지 정책 역시 신성장동력 마련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아울러 중산층 지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자 보호 강화, 복지 확대 등도 경제 불평등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연결되면서 경기여건 개선에 우호적
 - 특히,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된 상황에서 회복 양극화(K자 회복)가 심화될 경우 경기회복 부진은 물론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중요
 - 포용적인 이민정책의 경우에도 노동공급 증가 및 생산성 향상(자국민과 이민자의 노동시장내 역할 분담 및 상호보완 등에 기인)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개선에 일조
 - 선진국의 경우 이민 유입(총고용 대비)이 1%p 증가하면 5년 후 산출물은 0.88%, 노동생산성은 0.55% 증가(IMF)

그림6 | 경기여건에 따른 재정승수



주 : OECD 23개국 대상,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수준은 75bp
 자료 : IMF(20.4월 전망)

그림7 | 코로나 이후 美 소득수준별 고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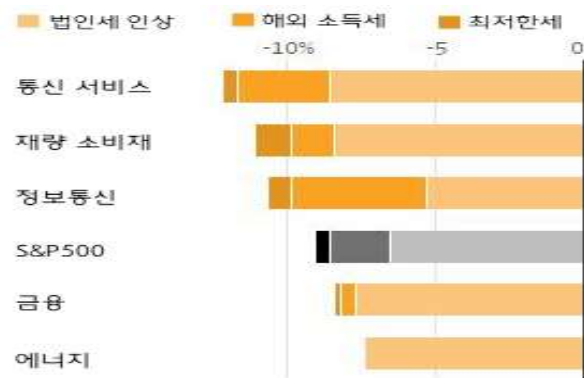
자료 : Business insider

- 다만, 기업부문의 증세 및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는 성장 제약요인
 - 바이든은 재정지출 재원 마련 및 트럼프 행정부의 불합리한 조세제도 복원 등을 위해 기업 부문에 대한 증세를 추진함으로써 기업 이익 감소 및 투자 제약 우려
 - BoA는 법인세 인상(21%→28%), 최저한세 도입(15%),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 인상(10.5%→21.0%) 등으로 S&P500 기업의 순이익이 9.2%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아울러 트럼프 정부와 달리 공정한 경쟁 구축을 위한 기업규제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의 환경규제 강화 등도 기업 활력을 저하시킬 소지
 - 기업 정책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근로자 주주비율 확대 등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개편과 기업집중 문제 해소(특히, 빅테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가능성

2. 국내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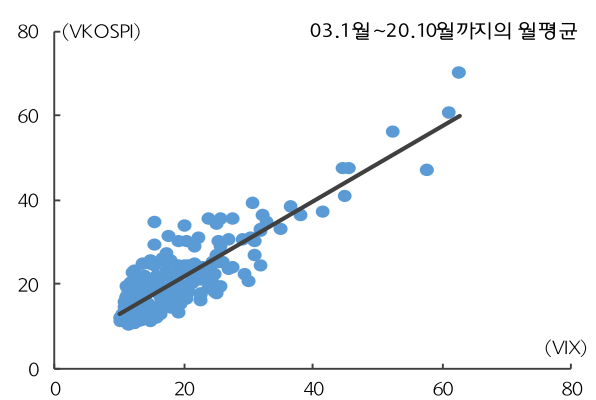
- 바이든 당선 기대 및 정책은 심리·금융·무역 경로를 통해 국내경제에 긍정적
 - (심리 경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예측 가능성 및 美 경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등에 힘입어 소비·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
 - (금융 경로) 바이든 당선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美 경기회복세 강화 기대 속에 글로벌 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원화 자산에도 우호적으로 작용
 -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로 인해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부각될 수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 (무역 경로) 바이든의 자유무역 추구와 美 성장모멘텀 강화는 수입수요 증대를 통한 직접 영향과 세계 경기회복을 통한 간접 영향으로 국내 수출과 경기여건에 긍정적

그림8 | 바이든의 증세에 따른 기업 순이익 감소폭



자료 : BoA(언론보도 재인용)

그림9 | 韓美 간의 높은 금융여건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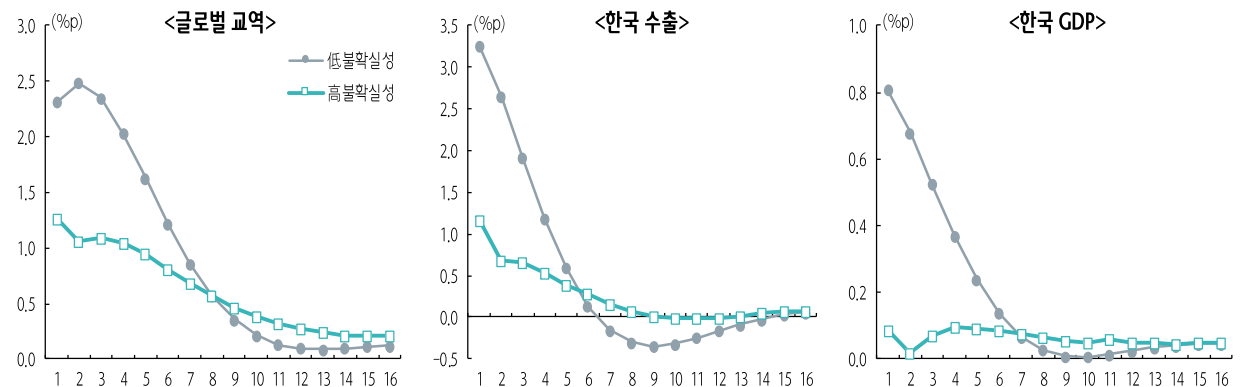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그러나 美 중심주의 무역 정책 및 美·中 갈등 지속 속에 무역 경로 약화 우려

-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동일하게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재건 등 美 중심주의 무역 정책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美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는 예상보다 저조할 소지
- 더욱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이 나 산업보조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美·中 무역갈등이 지속될 가능성
 - 바이든은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나 기존에 부과된 對中 관세의 철회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무역정책과 노동·인권 문제 등을 결부시킬 경우 美·中 갈등 심화 불가피
-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공조를 주장하면서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규제(탄소조정세, 수입쿼터 등 무역 불이익)를 강화할 경우 교역 위축 우려
 - 특히, 신흥국들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가운데 친환경 기술 개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 존재
- 미국의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될 경우 美 경기회복세 강화에 따른 국내외적인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지수, 美 GDP(YoY), 글로벌 교역량(YoY), 韓 수출물량(YoY), 韓 GDP(YoY)로 구성된 한계전환 벡터자기회귀 모형(Threshold VAR) 분석 실시
 - 분석 결과,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美 GDP 성장률의 상승이 글로벌 교역, 韓 수출, 韓 GDP 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축소
- 나아가 코로나19 이후의 GVC 재편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차원의 구조적 트렌드 역시 세계 교역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

조*경/0118430**/2020-11-10 16:25

그림10 | 美 성장률 1%p 상승에 따른 영향(Threshold VAR 분석의 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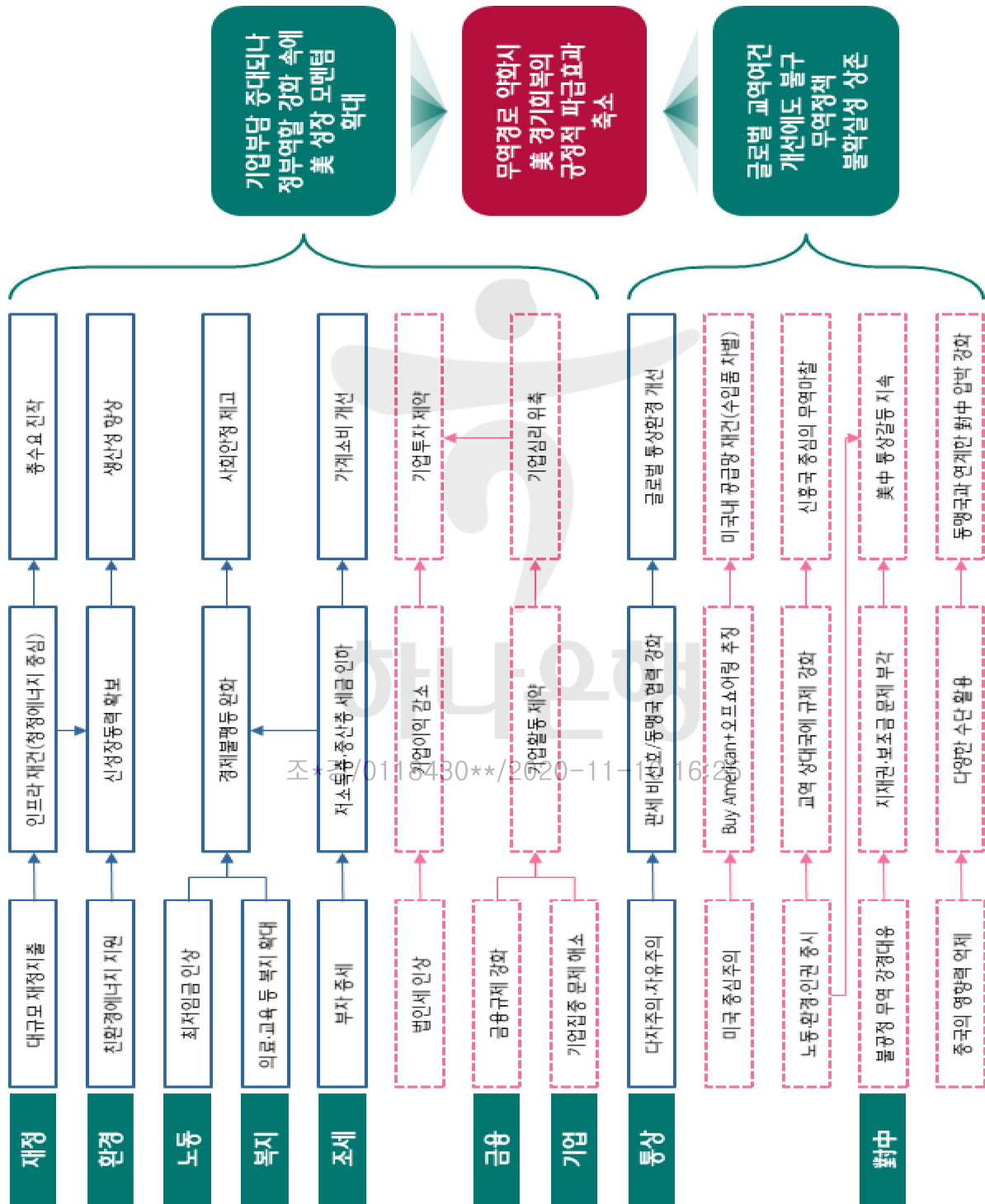


주1 : X축은 분기이며, 분석 기간은 01.1Q~19.4Q

주2 :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韓 수출과 韓 GDP 성장률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참고: 바이든 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



VI. 바이든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1. 금리

- 바이든 행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채권시장에는 약세 요인
 - 바이든 정부는 공격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확대와 경기 및 물가의 빠른 반등 가능성은 채권시장의 약세 요인
 - 바이든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으로서 증세는 물론, 국채와 지방채 발행을 시사
 - 트럼프 당선 당시에도 인플레이 우려로 미국채 10년 금리가 26거래일 동안 75bp 폭등
 - 특히 경제의 리플레이션은 연준 통화정책 운용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24년 에나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앞당겨질 수 있음
 - 더욱이 바이든 TF에는 정부부채 화폐화의 극단에 있는 MMT를 주장하는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소버린 리스크는 금리 상승 위험을 확대
 - 다만, 정부부채 보전을 위한 연준의 채권매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면서 공격적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리스크가 완화될 여지도 존재
 - 그러나 금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확보할 확률이 낮아짐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가능성 속에 대외금리의 단기 급등 리스크도 축소
- 국내 시장금리, 경기회복 경로에 기반한 완만한 상승 예상
 -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선거 불복으로 대선 결과 확정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주요국 코로나 확산세도 심화되면서 금리 상승압력은 제한될 전망
 - 다만, 바이든은 코로나 통제를 우선시해 경제 개방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경제 재봉쇄 우려에 따른 금리 하락압력 확대를 배제할 수 없음
 - 경제 정상화에 기반한 중장기적 금리 상승세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 정책 관망세 속에 금리 상승 시기가 이연되는 정도로 해석할 필요
 - 나아가 금번 선거 결과로 대외발 금리 급등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국내 금리는 경기회복 경로에 연동해 완만히 상승할 전망('21년 국고3년 0.85%~1.15%)
 - 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내년 초에 예정된 조지아주 상원의원 투표(2석)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할 경우 블루웨이브 현실화로 금리 상승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어 유의

2. 환율

- 바이든노믹스는 1)펀더멘탈 측면, 2)미국 자산 매력도 측면, 3)대외 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약달러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 (재정적자 심화) 바이든은 취임 후 제1의 과제를 ‘코로나 극복’으로 제시.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집행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부각, 약달러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
 - (기업 규제 심화) 바이든은 기술 및 금융 기업에 대한 규제를 예고. 이는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약달러 요인으로 작용
 - (온건한 대외정책) 국제 통상질서를 존중하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글로벌 무역마찰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상원을 공화당이 수성하여 분리의회 체제로 결론이 날 경우 일부 정책에 대한 상원 견제로 바이든노믹스 영향이 다소 희석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시대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우호적 환경이 예상되나, 미중 갈등 지속에 따른 불안감은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제한할 소지
 - (수출 환경 개선) 트럼프 이전으로 무역환경을 돌리고,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국내 무역확대 우호적
 - (우량 신흥국 자산 수혜) 다자무역과 동맹에 기반한 바이든의 대외 정책은 신흥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켜 우량 신흥국 자산의 선호도를 개선시킬 전망
 - 팬데믹으로 국가건전성이 악화된 터키,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달리 한국은 안정적 코로나 대응, 양호한 거시건전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신흥국 자산 중 매력도가 부각되며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미중 갈등 불확실성 지속) 한편 바이든 정부에서도 G2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만 관세 전쟁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은 낮으나, 비관세 측면에서도 통상 리스크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제한할 소지
 - 종합적으로 바이든의 시대에서 원/달러 환율은 2020년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1,100~1,150원의 범위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1,050원~1,150원의 하단을 보다 낮추는 흐름이 예상됨
 - 다만 미중 갈등에 따른 원화 변동성 확대 리스크는 바이든 정부하 지속적으로 자리

VII. 종합평가 및 시사점

- **바이든 당선 가능성으로 미국과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 완화 및 경기회복 기대**
 - 바이든의 승리가 유력해지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국제협력 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
 - 바이든의 대규모 재정지출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중산층 지원과 복지 확대 등에 힘입어 美 경제는 점차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
 - 특히, 코로나發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증대와 취약계층의 피해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바이든 경제정책의 유효성 기대
 -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여건 및 교역환경도 개선되면서 국내 실물경제 및 금융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그러나 美 대규모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 확대 속에 경기와 물가의 빠른 상승세가 맞물릴 경우 금리 급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만약, 미국發 금리 상승압력이 확대될 경우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재현될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소지

- **다만, 대선결과 지연 및 의회 양분 여부, 사회적 갈등과 코로나 향방 등에 주목**
 -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주요 경합주의 재검표, 법정 다툼 등으로 대통령 당선 확정 지연 및 정책 공백 발생 우려
 -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의 승부를 나타내고 있어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바이든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
 - 특히, 고소득자 및 기업에 대한 증세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재정지출의 재원 마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
 - 반면, 기업 증세 및 규제 완화 가능성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일조하면서 투자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소지(대선 직후 공화당의 상원 과반 유지 가능성으로 美 증시 상승)
 - 게다가 금번 대선 과정에서 부각된 양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할 때 대선 이후의 후유증 극복 및 사회적 안정 달성도 중요
 - 한편, 바이든의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美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코로나 사태 향방에도 주목할 필요

- 한국에 있어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 對中 압박 방식, 對北 정책변화 등이 중요
 -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무역정책과 美·中 무역갈등 지속 가능성, 교역 상대국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제 적용 등에 따른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재확대 여부에 주목
 -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인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심의 對中 압박이 강화될 경우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봉착할 위험 상존
 - 바이든은 당장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언급하였으나, 다자주의 무역체제 복원과 중국의 영향력 견제 등을 위해 CPTTP 재가입 가능성
 - 아울러 미국의 對北 정책이 “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북한의 의미있는 선조치를 우선사항으로 요구
 - 다만, 對北 정책에 있어 한국 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용인할 가능성도 존재

하나은행

조*경/0118430**/2020-11-10 16:25

[참고문헌]

- 강구상(202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20 No.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도희(2020), "미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정책 비교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69호
- 김현옥(2020), "바이든 대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망", 국립외교원, IFANS 2020-29
- 윤병수(2020), "美대선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요인과 남북관계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북한정보 33호
- 문종철(2020), "美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바이든 후보 당선 시의 경우", 산업경제이슈 제95호, 산업연구원
- 이규환·곽윤영(2020), "美 대선에 따른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국제경제리뷰, 해외경제포커스 제2020-40호, 한국은행
- 한국은행(2020), "미국 민주당의 2020 Party Platform(대선공약) 주요 내용", 현지정보, 워싱턴주재원
- 한국은행(2020), "미국의 인프라 재건 논의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망", 조사연구, 워싱턴주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20), "그린에너지뉴딜 브리프"
-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The Great Lockdown"
- KIET산업연구원(2020), "미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트럼프 대통령 재선 vs 바이든 후보 당선"조*경/0118430**/2020-11-10 16:25
-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 Moody's Analytics(2020),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Trump vs Biden"
- 웹사이트
바이든 선거 캠프, <https://joebiden.com/presidency-for-all-americans>
바이든 정권 인수위, <https://buildbackbetter.com/>

하나 CEO 경영이슈 Hana CEO Issues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TEL 02-2002-2200
e-mail ***ajf@hanafn.com
<http://www.hanaif.re.kr>



하나은행

조*경/0118430**/2020-11-10 16:25